



[해설] 삼성 vs LG 무한경쟁이 낳은 TV의 진화 03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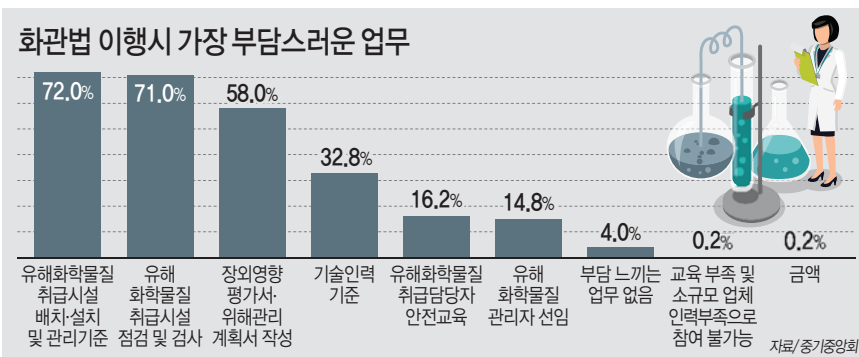
코스피	2091.92 (+3.96)	코스닥	634.50 (+1.51)
금리 (미국 3년)	1.43 (+0.04)	환율 (원/달러)	1183.10 (+1.90) (2일)

# ‘중소 발목’ 화관法-화평法 손본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 당·정·청, 내년 1월시행 앞두고 대책 조율... 이달중 발표

중소 경영타격 우려에 개선 목소리 조영래장관-중기중앙회 간담회 여론수렴 뒤 최종대책 조율할 듯



당·정·청이 화관법, 화평법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

대책에는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유예 일정기간 추가 연장 ▲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비용 정부지원 확대 ▲법 시행 후 일정 계도기간 부여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더욱 강화된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준비와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계에선 그동안 상당한 애로를 호소하며 제도 개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일부에선 관련법을 산업 현장에 맞게 재개정하거나 아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보호’ 명분으로 강화해 시행이 임박한 법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이 크

게 느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화관법·화평법 주무부처 수장인 조영래 환경부 장관은 빠르면 이달 중순께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대책을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환경부, 청와대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강화된 화관법·화평법에 대해 산업계 여파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 이달 중 내놓기 위해 현재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당·정·청이 함께 마련한 소재·부품·장비 종합대책을 놓고도 화관법·화평법에 대한 개정없이 나온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당·정·청 사정에 밝은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화평법·화관법을 놓고 그동안 중소기업계를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건의가 많았다”면서 “대책 내용은 상당부분이 조율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화관법·화평법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을 정부와 정치

권에 건의한 바 있다.

화관법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관련 ‘일일취급량’ 정의 개선 ▲취급시설 변경허가·신고시 ‘가동개시 신고’ 도입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 2년 연장 ▲기술인력 인정기준 확대 및 한시적 인정기간(2023년) 삭제 등이 건의내용에 두루 담겼다.

화평법은 ▲정부 시험자료 생산 매년 100→2500개로 확대 ▲유럽연합(EU) 등 해외 시험기관과의 소통 채널 구축 ▲제조 소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비용 지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0.1톤 이상→1톤 이상)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자금 지원 확대,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실제 내년부터 화관법·화평법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도금(표면처리)이나 염료, 안료 등 화학물질을 많이 써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비용 등 부담이 크게 늘어 경영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마비 우려” 文, 한국당 비판

수석보좌관 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인해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인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지난달 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기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했다.

(3면에 계속)

/우승준 기자 dn1114@

# 당신의 ‘항공 마일리지’는 안녕하십니까... 대량소멸 눈앞

대한항공·아시아나 10년주기 소멸 2009년 적립 마일리지 1월 증발 공정위가 꺼낸 ‘복합결제’ 방안 시범사업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객기가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량의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복합결제안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10년을 주기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 극히 제한적인 사용처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던데다, 없었던 소멸시효까지 생기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꺼내들었던 ‘복합결제안’의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12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했으나 미사용한 마일리지 소멸됐다. 또한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양사 모두 2009년

한해에 적립된 마일리지 사라지게 된다. 적립 기간이 반년 가량에 불과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1년치의 마일리지 소멸 대상에 해당돼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지만 전체 소멸 마일리지 얼마나 되는지 규모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 내부의 정보로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고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얼마나 되는지는 내부적인 자료라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 마일리지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되는데, 지난 9월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에 따른 부채는 각각 2조3111억원, 7238억원이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시효가 논란

이 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복합결제’를 해결책으로 꺼내들었다. 항공권 구매 시 오직 마일리지로만 전체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 지금과 달리,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복합결제안’은 아직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복합결제안은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다만 제도를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시범 사업을 먼저 하다가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다. 일단 시범 사업이란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매각을 이유로 아직 복합결제안을 검토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복합결

제안의 진행은 전적으로 사업자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올해 1월 소멸된 항공 마일리지를 반환해달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사에 제출해 관련 사실 정보를 공개하라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달 20일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관계자는 “이번에 마일리지 소멸되는지 우리도 알 수 없으나 엄청난 양이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 규모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며 “소비자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자의 재산권 부문에 있어 권리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